

【 2015.07.08(수) 강원일보 】



건설협회 도회 임원회의 대한건설협회 도회(회장:오인철·앞줄 왼쪽 다섯번째)는 7일 춘천시 동면 만천리의 도회 사무실에서 제21대 임원회의를 열고 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 2015.07.08(수) 강원도민일보 】



건설협회 도회 2차 임원회의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장을 비롯한 제21대 임원진들이 7일 오후 도회 대회의실에서 제2차 임원회의가진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 기획조정실장에 김명선씨 내정

<양양출신>



양양출신 김명선(50·사진) 행정자치부 지역발전과장이 도 기획조정실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진민수

새누리당 도당 위원장 김기선 의원 추인



새누리당 김기선(원주 갑·사진) 의원이 도당 위원장으로 공식 활동한다.

7일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오는 8월 미국 캔자스시티로 파견근무를 떠나는 김성호 기획조정실장의 후임으로 행자부 김명선 지역발전과장이 내정돼 현재 임명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지난 6일 열린 최고위원회 의에서 강원도당위원장 선출 결과를 최종 승인했다. 김 의원은 내년 6월까지 새누리당 도당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내년 20대 총선을 진두지휘 한다. 서울/진민수

김 과장은 원주 지경초교와 양양, 양양고, 성균관대, 서울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경기도외자유치립장, 안전행정부 주민과



태창건설, 고성군에 장학금 기탁 태창건설(대표 유인섭)은 7일 고성군청을 방문, 윤승근 군수에게 고성향토장학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 철새업체에 '경제올림픽' 흔들

평창동계올림픽 특수를 노린 '철새 업체'로 강원도가 자부하던 '경제올림픽'이 시작부터 흔들리고 있다. 최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1183억원 규모의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 전기공사사업을 발주한 결과, 도내 향토 업체가 수주한 금액이 157억 원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지역에서는 주소지만 이전하는 '철새업체'에 대한 단계별 페널티 적용과 지역별 상황에 맞는 신용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강원도민일보는 7일 강원도와 전기공사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긴급 지상좌담회를 마련했다. 김기섭

'무늬만 강원업체' 경제 올림픽 시책에 구멍

이슈&이슈 철새업체에 밀린 올림픽 전기공사

속보-동계올림픽 관련 전기공사 입찰에서 주소지만 강원도로 옮긴 '철새 업체'들에 밀려 강원도내 전기공사업체들이 상대적 불이익(본지 8월30일자 1면)을 받으면서 강원도가 자부하던 '경제올림픽' 시책이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원주-강릉 복선전철 사업에는 1183억원 규모의 자금이 투입됐지만 도내 전기공사 업체가 지역 의무 공동도급을 통해 수주한 금

액은 전체 낙찰액 중 157억 원에 불과했다. 8개 대규모 공사를 낙찰받은 8개 업체 가운데 5개 업체는 서울, 충남, 경기 등 외지 업체였으며 나머지 3개 업체는 강원도 업체다. 하지만 이들 3개 업체는 표면적으로 강원도 업체로 분류됐지만 입찰을 한달여 앞두고 지난 4월 서울에서 춘천으로 주소지를 옮긴 이른바 '철새 업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한 업체는 서울에서 20여명의 직원을 거느

입찰 한 달 전 주소지 이전 위장업체 비난 수주 후 외지업체 공동도급...향토업체 불리

린 중견 업체였지만 춘천으로 이전한 후에는 직원을 5명 남짓으로 줄여 공사만 수주하려는 '위장 업체'라는 비난까지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도내 전기공사 및 입찰 전문가들은 '철새 업체'가 지역 의무 공동도급을 악용하고 있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 '철새 업체'로 지목받은 이들 3개 업체는 입찰을 앞두고 주소지를 이전한데다 시공실적과 경영 상태가 양호해 단독수주 가능성

이 높고 단독수주 후에는 외지 업체와 공동도급을 하기 때문에 도내 향토 업체가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찰 180일 이전에 도내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업체에 대해 단계적으로 페널티를 적용하는 방안과 지역별 형평성에 맞는 신용평가 산정 등이 제시되고 있다. 안은복 rio@kado.net 박성준 kwwin@kado.net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전기공사 전입업체 수주현황〉

구분	업체명(금액)	수주액(금액)	비율
서울주-도내간 전역설비공사	우원전(133억)	133억	11.2%
	우원전(133억)	157억	13.3%
신부-강릉간 전역설비공사	일석(59억)	59억	5.0%
	우진건설(총복-41.8억) 재양건설(경기-18억)	59.8억	5.1%
도내-관내간 전역설비공사	승이전기(60억)	60억	5.1%
합계		157억	13.3%



긴급 지상좌담

“도내 시행사업 지역업체 참여 장치를”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다양한 분야의 업체들이 강원도로 몰려들고 있다. 하지만 외지 업체 대부분은 주소지만 도내로 이전, 지역 의무 공동도급 제도를 악용하면서 도내 업체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강원도민일보는 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짚어보고 대책을 모색하는 전문가 긴급 지상좌담회를 마련했다.

-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로 외지 업체들의 유입이 급증하고 있다.

△차 회장= 외지 업체가 급증한 것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역가산점을 지역 의무 공동도급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동계특수만을 노린 철새 업체들이 급증, 결국 강원도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강 대표= 최근처럼 수주하기 어려웠던 적은 없었다. 철새 업체들은 대부분 본사를 서울과 수도권에 두고 공사 완료 후 다시 서울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역발전에 큰裨益이 된다.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원주-강릉 복선전철 전기공사에 대한 향토기업들의 불만이 많다.

△강 대표= 외지업체들은 서울과 수도권 등에서 공사를 수주한 경험이



최원식 회장, 차부환 회장, 노승만 본부장, 강진원 대표

“300억 이상사업” “상도의 버리는” “사업 세분화한” “지역별 평등한”
전국 입찰 분류 “업체 업체에게” “발주방식 필요” “신용등급 평가”
“도내 기업 불리” “불이익 있어야” “업체간 협력도” “이뤄져야 할때”

있어 신용평가 등급이 높다. 주소지를 도내로 이전해도 신용평가 등급이 유지되기 때문에 사업 수주에 유리하다. 상대적으로 도내 업체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

△노 본부장= 지역 의무 공동도급 입찰에서 도내 기업이 수주한 금액(전체의 13%)은 매우 미흡하다. 이번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외지업체 유입을 제한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야 한다. - 외지 업체 급증에 따라 도내 향토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되는데.

△차 회장= 철새업체 이전이 가속화되면서 도내 전기업체의 몫을 외지업체에 빼앗기고 있다. 사업을 수주하지 못한 도내 업체는 경영 악화로 부도 상황에 직면하고 외지 업체는 매달 불만 채 다시 새로운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강령도를 떠날 것이다.

△최 회장= 강원도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경우 동계특별법에 의해 총공사비의 40% 지분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300억 이상 이 되는 대형 사업의 경우 국가 계약법에 따라 조달청에서 전국 입찰로 관리되기 때문에 도내 업체들의 참여가 쉽지 않다.

- 도내 기업들의 참여 방법과 제도

적 개선방안은. △최 회장= 강원도가 발주하는 사업의 경우, 도내 업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다. 국가가 발주하더라도 강원도에서 시행되는 사업에는 도내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차 회장= 지역 의무 공동도급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최소한의 상도의마저 저버리는 업체업체들에게 불이익을 줘야 한다.

△강 대표= 지역별 형평성에 맞는 신용평가 등급이 이뤄져야 한다. 또 도내 업체의 공사 수주를 위해 공사 금액을 최소화해 발주하거나 도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노 본부장= 해당 지자체에 소재한 지역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사업을 세분화하는 발주 방식이 필요하다. 특히 외지업체와 경쟁하기 위해 도내 업체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는 필수다.

정리-안은복·박성준

- 〈참석자〉
- △최원식 강원도 건설국장
 - △차부환 한국전기공사협회 강원도회장
 - △노승만 강원발전연구원 기획경영본부장
 - △강진원 민음 대표 (원주-전기공사사업 25년)

SOC예산 사상 첫 '26兆' 고지 넘는다

올해 본예산 24.8兆에 추경 1.5兆 기대... “집행속도에 경기부양 효과 달려”

올해 SOC(사회기반시설)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26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앞서 25조원에 가까운 SOC 본예산이 편성된 가운데 1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SOC 예산은 총 26조원을 웃돈다는 계산이 나온다.

7월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SOC 예산은 24조8000억원 규모의 본예산과 1조5000억원 수준의 추경을 합쳐 26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SOC 예산은 지난 2008년 19조6000억원 규모의 본예산과 9000억원가량의 추경을 포함해 20조5000억원을 기록한 이후 2009년에는 본예산(24조7000억원)과 추경(8000억원) 등 25조5000억원이 편성되며 정점을 찍었다.

2010년 들어서는 25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5.7% 줄었고 2011년과 2012년에도 각각 24조4000억원, 23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8%, 5.3% 각각 축소되며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2013년에는 24조3000억원 규모의 본예산과 7000억원 정도의 추경으로 전년 대비 8.2%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지난해 들어 전년보다 5.2% 줄어든 23조7000억



원으로 다시 감소로 돌아섰다.

당초 올해 SOC 예산은 정부의 SOC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축소 기조가 예상됐지만 SOC가 경기부양 카드로 제시되면서 본예산이 24조8000억원으로 전격 확대됐고 추경에도 1조5000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1조원이 넘는 추경이 포함된 데 힘입어 올해 SOC 예산은 사상 최대 규모를 사실상 예약했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가정할 경우 SOC 예산이 26조원을 넘는 건 이번

이 처음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6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국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다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해 다음달부터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26조원을 웃도는 SOC 예산을 연내 전부 집행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정부는 통상 세수 결손이 발생하는 4분기에는 SOC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기 어려운 만큼 건설투자가 부진했지만 이번 추경 편성으로 4분기에도 SOC 예산 집행이

탄력을 잃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앞서 추경을 편성했을 때도 적지 않은 예산을 쓰지 못한 경우가 허다해 SOC 예산 편성의 효과가 나타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SOC 예산이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됐지만 편성보다는 실제 집행이 더욱 중요하다”며 “편성만 해 놓고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다면 정부가 노렸던 경기부양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